

이 보도자료는 2024. 12. 16.(월) 15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

전문공보관 이준호

전화 02-530-4780 / 팩스 02-536-5410

## 보도자료

2024. 12. 16.(월)

제 목

### 유제품 제조사 前 회장 일가 및 임직원 비리 사건 수사 결과 - 前 회장 등 2명 구속 기소, 前 대표이사 등 3명 불구속 기소 -

####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
- ☑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(부장검사 김용식)는 오늘(12. 16.) 직원 2,000명, 매출액 1조 원, 자산총액 8,000억 원 상당인 유제품 제조사 甲의 대주주 회장 A 일가 등에 대한 자산 유용 및 리베이트 수수 등 사건을 수사하여, 前 회장 A와 前 연구소장 B 등 2명을 구속 기소, 前 대표이사 D, E 등 3명을 불구속 기소 하고, A, B, D, E의 배임수재액 합계 100.3억 원을 범죄수익환수 조치 예정임
    - A : 횡령·배임 합계 217.5억 원, 배임수재 합계 43.7억 원, 총 261.2억 원
    - B : 배임수재 합계 53.7억 원 / D : 배임수재 1.8억 원 / E : 배임수재 1.1억 원
  - 이 사건 수사를 통해 A가 2000.경부터 2023. 4.경까지 도관업체 끼워넣기, 현금 리베이트, 가장 급여 돌려받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략시켰고, A의 일가 또한 회사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법인 차량과 직원을 사적 유용하는 등 상장기업을 私금고화하여왔음을 확인함
  - 나아가 B~E 등 일부 회사 임직원들도 이러한 A의 비위행위에 편승하여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도관업체를 세우는 등 회사 전반에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가 만연하였고, 그로 인하여 회사의 매출과 영업 이익이 감소되어 상장기업의 주식가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음을 밝혀냄
  - 검찰은 A가 과거 다수의 형사사건 등에서 증거를 조작·인멸하여 자신의 불법행위를 암장해왔고, 특히 2021. 4.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사건\*, 2022. 8. 횡령 고발 사건 등에서 적극적인 증거조작 및 인멸로 형사책임을 회피한 사실을 밝히고, A를 식품표시광고법위반,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인지, 기소함
- \* 2021. 4. ‘甲 회사 유제품을 마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이 된다’는 내용으로 발표하여 대표이사 등 5명이 식품표시광고법위반죄로 1심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(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)

#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 ① 피고인

순번	피고인	성별, 나이	甲 회사 내 지위	처분
1	A	남, 74세	前 회장	구속 기소
2	B	남, 63세	前 중앙연구소장	구속 기소
3	C	남, 51세	前 구매부서 부문장	불구속 기소
4	D	남, 68세	前 대표이사	불구속 기소
5	E	남, 58세	前 대표이사	불구속 기소

## ② 주요 공소사실 요지

순번	피고인	공소사실
1	A, 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00. ~ '23. 4. A 친인척 생활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도관업체를 통해 피해회사 甲에 유통마진 <u>171억 원</u>의 손해를 가함【특경법위반(배임)】</li> <li>· '05. ~ '21. 6. 甲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<u>43.7억 원</u>을 수수하고, A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(6억 원)를 받게 함【배임수재】</li> </ul>
2	A, 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11. 6. ~ '23. 4. 甲 거래업체 운영자를 이용하여 광고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으로 <u>16.5억 원</u>을 가장 지급 후 돌려받음【특경법위반(횡령)】</li> </ul>
3	A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08. ~ '21. 4. 甲 법인 소유 고급 별장, 법인 차량, 법인 운전기사, 법인 카드 등 합계 <u>30억 원</u>을 사적으로 유용함【특경법위반(배임)】</li> <li>· '21. 4. 甲 회사의 유산균 제품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함【식품표시광고법위반】</li> <li>· '21. 4. 위 식품표시광고법위반 사건 암장을 위해 직원에게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의 휴대폰을 인멸하도록 지시【증거인멸교사】</li> <li>· '24. 8. ~ 9.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행기사에게 자신 및 가족들과의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【증거인멸교사】</li> </ul>
4	B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11. ~ '21.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리베이트 <u>53.7억 원</u> 수수【배임수재】</li> </ul>
5	D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14. ~ '21. 거래업체 1곳으로부터 리베이트 <u>1.8억 원</u> 수수【배임수재】</li> </ul>
6	E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'18. ~ '21. 거래업체 1곳으로부터 리베이트 <u>1.1억 원</u> 수수【배임수재】</li> </ul>

※ '21. 4. 식품표시광고법위반 및 '22. 8. 별장 등 甲 법인 자산 사적 유용 사건에서, 회장 A는 관여 사실 은폐 및 허위 자료 제출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, 본건으로 전모 확인, 기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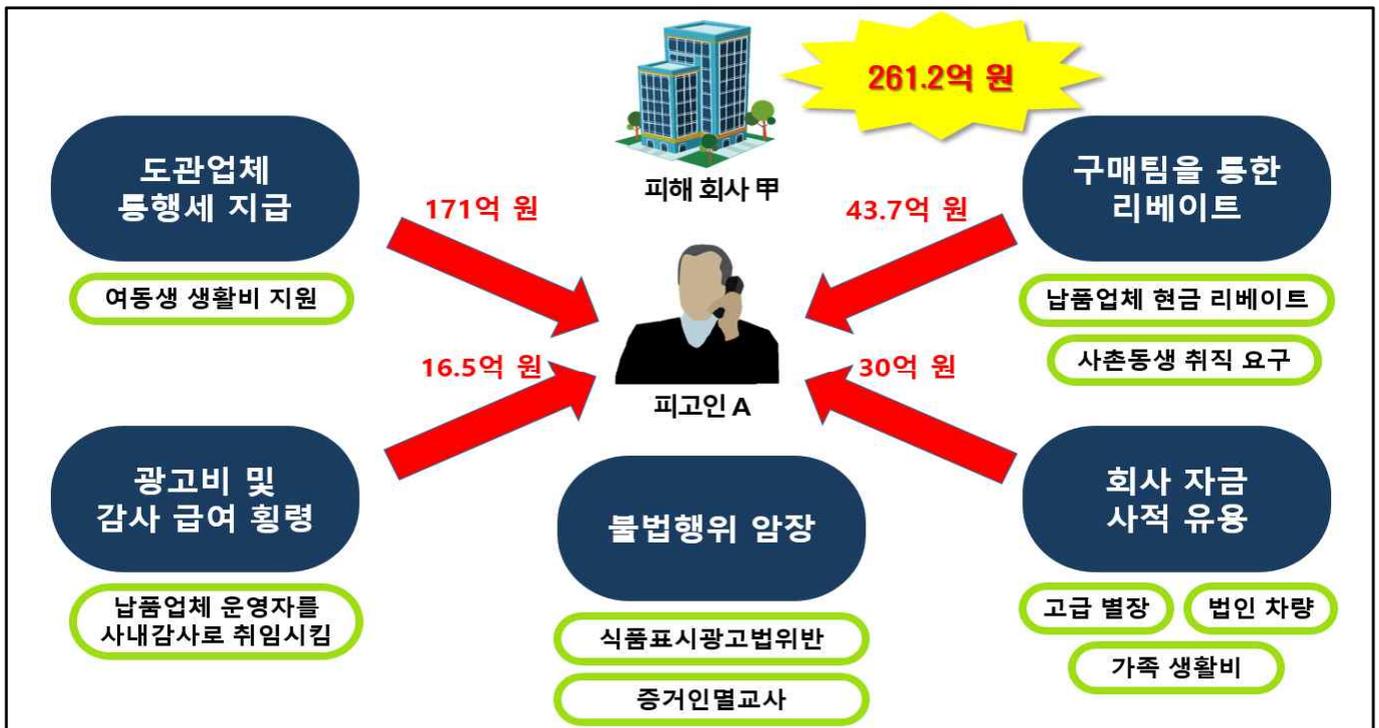
## 2 수사 경과

- '24. 08. 02. 고소장 접수
- '24. 08. ~ 09. 고소대리인, 사건관계인 등 40여 명 조사
- '24. 10. ~ 11. 1, 2차 압수수색(甲 본사 등 24개소)
- '24. 11. 22. A, B 구속영장 청구
- '24. 11. 28. A, B 구속영장 발부
- '24. 12. 16. A, B 구속 기소 / C, D, E 불구속 기소

## 3 수사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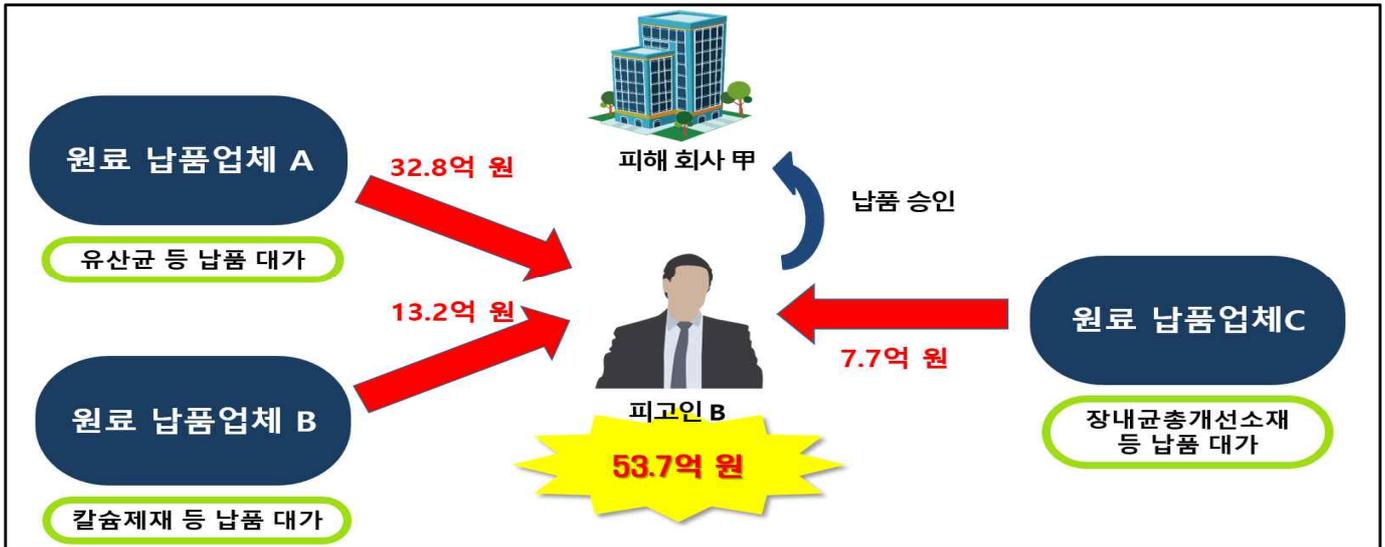
### 1 1 상장회사를 私금고화하기 위한 각종 불법행위 총동원 확인

- A는 2000.경부터 2023. 4.경까지 도관업체 끼워넣기, 현금 리베이트, 가장 급여 지급 후 돌려받기, 회사자금의 사적 유용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장회사인 甲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시켰음



## ② 회사 임직원들의 만연한 도덕적 해이 적발

- 회장인 A 뿐만 아니라, 중앙연구소장 B 등 다수의 회사 임직원들 또한 독자적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도관업체를 세우는 등 회사 전반에 걸쳐 도덕적 해이(moral hazard)가 만연하였음을 적발함



## ③ A의 증거인멸·증거조작 지시 등으로 암장된 사건 실체 규명

- A가 과거 별건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 관여를 감추기 위해 직원들 휴대폰을 강에 버리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암장하였음을 규명하고 식품표시광고법위반,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인지·기소함
- A가 회사 소유의 고급 콘도를 개인 별장으로 사용한다는 혐의로 고발되었던 사건에서도 마치 위 콘도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을 밝히고, 배임으로 기소함

## 4 수사의 의의

- 상장회사는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고, 소유자와 경영자는 분리되어야 함에도 대주주가 상왕 행세를 하며 회사를 마치 개인소유인 것처럼 좌지우지하는 그릇된 기업문화가 잔재하고 있음

- 甲 회사 임직원 및 노조원들은 前 회장 A 일가의 위와 같은 잘못된 경영방식으로 인해 직원들이 그 고통과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탄원하였음
- 검찰은 회사를 私금고화한 오너 일가의 비리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회사 임직원들의 개인 비리까지 철저히 파헤쳐 그 실체를 규명하였고, 前 회장 A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암장했던 형사사건들도 밝힘
- 나아가 범죄가 중대한 前 회장 A, 前 중앙연구소장 B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구속하고,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이익이 아닌 손해로 귀결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였음

## 5 향후 계획

- 서울중앙지검은 상장기업의 사유화에 경종을 울리고, 은밀히 이루어지는 각종 비리행위에 대한 신속·엄정한 수사와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며,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